

월요광장

‘거짓말’에 대해 생각한다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거짓말 없는 하루, 가능할까? 거짓말을 엄밀하게 이해한다면 불가능하다. 거짓말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고 듣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거짓말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일상적인 수많은 말과 표현들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거짓말이다.

소위 예의와 사회적 관계를 위한, 또는 직업적이고 습관적인 좋은 말들은 ‘선의의 거짓말’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착한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다. 문체가 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런 구별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비판하지만 어떤 경우에

는 오히려 동의하거나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말은 예의 없이 일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상적인 거짓말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하거나 걱정을 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큰 비난을 받기 쉽다. 거짓말이 미치는 결과와 이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이와는 달리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다. 거짓말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과 결과에 상관없이 아무런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거짓말은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칸트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고 거짓말의 동기와 결과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행위보다는 그 거짓말의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옹호하거나 적

대감을 갖는다. 거짓말의 결과가 ‘나’에게 미치는 파장이 거짓말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관심하거나 구경하는 태도를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은 더 위험하다. 거짓말하는 의도의 본질은 사람들의 관심 방향을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듣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며 진실보다 더 진실처럼 보이는 순간 다수의 이름을 가지고 거대한 권력이 된다. 술한 역사적 경험들이 이를 증명한 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이름으로 공익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깊숙하게 건드리는 이유가 있다.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뿌리 깊은 무관심 그리고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의 열렬한 동의를 통해서 ‘진실’을 만들어 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방식의 작동에는 사적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 예외가 없다.

우리 모두가 칸트처럼 엄격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사실 어렵다. 우리는

가족을 안심시키고 친구와 이웃을 격려하며 그저 위로하고픈 마음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문득문득 한다. 하지만 ‘나쁜 거짓말’은 계산되고 조직적이고 구조화된다. 상대방에게 힘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착하기 위해서 ‘사실과 진실들’을 가공하고 생산한다.

이러한 거짓말들의 최종 목적은 공동체와 관계의 신뢰 파괴다. 신뢰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허소리’라고 믿게 함으로써 거짓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사실 거짓말을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대놓고 마구잡이로 해 대는 거짓말은 담당하기조차 해서 더 힘들다. 이럴 때는 소크라테스의 길을 생각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거센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다이몬’이라고 하는 내면의 양심이 하는 소리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자 했다.

거짓말이 거침없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명예와 권력과 재화의 추적에만 여념이 없는 거짓말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밝은 눈으로 혼탁의 바다를 응시해야 할 때다.

社說

고속열차 내 범죄 ‘승객 보호 대책’ 서둘러야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내에서 폭행이나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도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등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성폭력이 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도(326건), 상해·폭행(260건), 철도안전법 위반(14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도 다섯 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열차 내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처리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KTX(8량 기준)나 SRT(10량 기준)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하지만 고객 관리 인

력은 팀장 한 명과 승무원 한 명씩 뿐이다. 그나마 이들은 열차 내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내부 규정상 직접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역에 정차한 뒤 철도경찰을 탑승시켜 대처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엇그제 서울발 광주행 SRT에서는 남자 승객 두 명이 다른 남자 승객 한 명을 10여 분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승객 수십명은 열차가 승객에게 도착해 철도경찰이 투입될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고속으로 운행되는 열차에서 혹여 ‘묻지 마 범죄’라도 벌어진다면 어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지만 광주철도경찰의 경우 55명의 정원으로 하루 252대의 열차가 운행되는 전남·전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철도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초기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도쿄 올림픽 ‘독도는 일본 땅’ 강력히 대처를

정부는 지난달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데 대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최근 일본이 우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되는 지도는 일본 영토 내의 성화 봉송 경로를 표시한 페이지(https://tokyo2020.org/en/special/torch/olympic/map/)에 올라 있는 것이다.

해당 지도에는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가 명칭 없이 점으로 표시돼 있다. 이를 발견한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월 중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공식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누노무라 유키히코(村野幸彦) 대외 조직위 사무부총장은 문제의 지도에서 독도를 빠리는 한국의 요구에 “(지도) 바뀔 예정이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고도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지도는 성화 봉송 루트를

알기 쉽도록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채용해 제작했다”며 “특히 바뀔 예정은 없다”고 누노무라 부총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에 독도가 표시된 것은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의 주장에 우리 정부는 대응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이처럼 일이 어이없게 된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지도에 표기한 것은 올림픽을 계기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독도 표시를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보이콧 등 더욱 강력한 대응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반려동물 관리



이광재
변호사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 주인 K씨는 자택에서 핏볼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한 총 여덟 마리의 개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기르던 핏볼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씨가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고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법원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입니다.

법원은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 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

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개 주인은 개를 마당에 두면서 목이 풀어 풀릴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놓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핏볼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여섯 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3개월 이상 나이인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사건이 최근에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폭스테리어가 어린 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서 애완견, 특히 맹견에 해당하는 개를 키우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애완동물 관리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완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12조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이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 이상 된 것을 말합니다.

등록을 하면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해 외출시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하고, 개 주인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공원 벤치에 오줌을 똥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위 법률 49조에 따라 치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원에 입장할 때에도 줄을 착용하여 입장시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는 물론 생명체인 애완동물을 잘 보호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애완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안됩니다.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도구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하는 행위(즉 어디 가서 버리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기 고

미·중의 패권 싸움과 대한민국



박성열
광주전남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국제 정치학에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라는 용어가 있다.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한 역사가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3-404)은 그리스 반도 패권을 둘러싸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간 벌어진 30년 전쟁을 서술한 것이며,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이 생존과 국익을 위해 경쟁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하버드대 국제정치학자인 엘리슨(Allison)이 몇년 전 퍼낸 ‘예정

된 전쟁’(Destined War)이라는 책을 통해 인류 역사 이래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간 대결 상황 16번 중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음을 갈파하면서 다시 열거했으며, 최근 미중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제 전방위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오는 2050년에 세계 패권 국가로 우뚝 선다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제시될 때부터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은 예고된 것이었다. 미중은 관세 부과를 앞세운 무역 전쟁에 이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INF(중거리 핵전력 협정)를 파기한 것도 러시아보다 INF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제 한반도는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상수가 되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신행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은 낙관하기 어려워졌으며, 아베 일본정부가

헌법 개정과 보통 국가화를 지지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요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국민들도 뭔가 정세가 불안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실, 투키디데스 함정의 핵심은 강대국간 경쟁 구도와 함께 전쟁을 촉발하는 약소국간 갈등이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양대 패권국인 스파르타와 아테네간 전쟁은 각각 자신들에 속하던 조그만 도시 국가간 갈등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럼 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전문가들은 힘의 논리가 핵심인 현실 국제정치에서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도덕적 중요성보다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둔 현실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국가의 핵심 이익은 생존과 국익

의 보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힘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고, 아울러 일본과의 경제적 갈등과 범블로 안보적 공조 체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민 지배를 중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규제에 나선 일본이 있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과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에 대해서는 돌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도발하는 것보다 협상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과 국익에 도움이 됨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다. 국내적 갈등 요인은 대외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는 지지 계층을 의식하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생존과 국익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절대자인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무엇이 하고 있었을까?”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이런 질문은 아주 오래 전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백목’의 저자이기도 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질문에 대해 들었던 대답 중 하나를 농담조로 소개한 일화가 지금도 전해진다. “깊은 신비를 조사하려는 너 같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권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을 구름 아래로 끌어 내리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고, 별다른 하느님

시위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권위는 흔들리게 되고, 일단 강고한 권위가 의심받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권력이 모래성처럼 스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홍콩의 거리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광둥어로 불리고 있지만, 5·18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의 상징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만과 홍콩 노동계에선 이미 널리 알려진 노래다.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 및 시민혁명과 함께

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의 대장정이기도 하다.

1980년 광주 시민이 의로운 피로 피워냈던 한국 민주주의의 꽃 5·18광주민주화운동과 2016년 차가운 겨울 전국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덥혔던 촛불 혁명은 군부 독재자와 부패한 지도자들이 쌓아 올린 권위를 바닥에서부터 흔들며 무너트린 권위를 바탕으로 반응하는 이유 역시 “홍콩의 시위는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일국양제에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촉구하는

‘검은 행진’

일지라도, 자신의 숨겨진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적의를 보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향한 인류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열망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국이 홍콩 거리를 뒤덮은 ‘검은 행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 “홍콩의 시위는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일국양제에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촉구하는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